

종합·해설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9일(현지시간)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표들을 파리 포시즌 호텔에 초청해 만찬을 주재했다. 왼쪽부터 정몽구회장, 현대차 브라질 대리점 카르로스 안드레데 사장, 로세르티엘레 BIE 사무총장, 우민 BIE 의장, 정찬용 유치위원회 부위원장. <현대·기아차 제공>

정몽구 회장 파리 홍보 만찬, 박준영 지사 동유럽 방문

여수엑스포 유럽표 공략 박차

8개국 추가 가입...BIE 회원국 106국으로 늘어

현대·기아차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박람회 개최지 결정의 결정적 변수가 될 유럽표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명예 위원장인 정몽구 현대·기아차 회장은 지난 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60여개 세계박람회기구(BIE) 회원국 대사 및 대표, 현대·기아차 대리점 사장단 등 230여명을 초청, 여수박람회 홍보를 위한 만찬을 주재했다.

정 회장은 이 자리에서 "여수 박람회를 통해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이 함께 가능한 새로운 모델과 발전계획을 만들 수 있도록 여수를 굳게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현대·기아차의 해외 대리점 사장단 등 글로벌 네트워크도 여수박람회 유치를 위한 본격 지원활동에 착수했다.

동유럽 3개국의 표심을 잡기 위해 박준영 전남지사 등과 함께 경제사절단을 구성해 유치활동을 벌이고 있는

여수박람회 유치위는 우크라이나에서 불기리아 공략을 시작했다. 지난 7~9일 경제사절단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박준영 전남지사는 경제부 장관, 외교부 차관 등을 만나 유치 지지를 요청했다.

이어 박지사는 10일 불가리아 소피아에서 대한상의 경제사절단과 함께 여수박람회 유치활동을 벌였으며 11~12일에는 체코를 방문한다. 경제사절단에는 박 지사를 비롯, 위재춘 여수시장의 회장, 이순조 명승건축그룹 회장, 조보훈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이사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한편 박람회 유치전이 뜨거워지면

서 개최지 결정 투표권을 행사하는 BIE 소속 회원국이 10일 현재 106개국으로 늘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6월 98개국 이었던 BIE 회원국이 에콰도르, 파키스탄, 시리아, 쿠웨이트, 투발루, 마셜, 키리바시, 콩고 등 8개국이 회원국으로 추가 가입함에 따라 10일 현재 106개국으로 늘었다.

특히 치열한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나라와 모로코, 폴란드 3개국이 외교전을 통해 '군소 국가'에 회원국 가입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가로 가입한 회원국의 표시가 개최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여수박람회 유치 기원

목포시민 결의대회

여수시에서 '2012여수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목포시민 결의대회'가 열린다. 정종득 목포시장과 박병섭 시의회 의장, 목포시립예술단체 회원 등 목포시민 400여명은 11일 여수시를 방

문해,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기원 목포시민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목포시민들은 식전행사로 여수공항에서 오토모빌 차량 퍼레이드에 이어 목포역상 고적대를 선두로 중앙동 로터리에서 시민회관까지 1.7km 구간을 피켓과 어깨띠를 착용하고 엠블럼기를 흔들며 가두 캠페인을 펼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전윤철 감사원장 연임 유력

검찰총장에 임채진 연수원장 검토

청와대는 11일 인사추천위원회를 열어 다음달 9일 임기가 끝나는 전윤철 감사원장과 다음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임 인선 문제를 확정한다. 감사원장에는 현 전윤철 원장의 연임이 유력하며 검찰총장에는 임채진 법무연수원장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임기가 임박했다"며 "내일 인사추천위원회를 개최, 두 직책에 대한 후임 인선을 논의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내달 23일 임기가 만료되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임자

후보군에 대해 "언론에서 거론되는 분들이 총장 후보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신임 검찰총장에는 사시 19회인 임채진 법무연수원장을 비롯, 안영욱 서울중앙지검장, 정진호 법무차관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임채진 원장이 검증, 국회 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가장 근접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내달 9일 임기 4년을 채우게 되는 전윤철 감사원장은 연임이 유력하다. 청와대에서는 당초 연임보다는 새로운 인물을 선임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4년 임기의 감사원장의 임명은 차기 정부에 부담이 되는데다 국회 동의를 얻는

것도 간단치 않다는 점에서 연임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새로운 인물을 선임할 경우, 국회 동의를 얻는 것도 간단치 않은데다 감사원장 대행 체제도 원장 대행을 맡을 수 있는 감사위원 등이 11월과 12월에 임기를 마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연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진다.

이와 관련, "전 원장 후임으로 원장 대행 맡을 감사위원들도 11월과 12월에 4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야 한다"며 "이 경우 감사원의 최소 구성 요건인 감사위원 5명을 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검찰총장은 2년이다. 이들은 참여정부에서 4개월 남짓 임기를 지낸 뒤 차기 정부에서 대부분의 임기를 지내게 된다.

전윤철 감사원장 거취 촉각

해남·목포 지역구 의원들 연임설 반색

청와대가 신임 감사원장을 11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전윤철 현 감사원장의 거취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 원장이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날 경우, 고희(해남)이나 유년시질을 보낸 지역(목포)에서의 18대 총선 출마가 유력한 반면 연임될

경우 임기 문제 등을 고려할 때 국회의원직 출마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채일병 의원(해남·진도)과 이상열 의원(목포)에게는 비상경계령이 떨어진 상태며 이 지역에서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입지자들도 전 원장의

거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장, 기획예산처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경제부총리까지 지낸 전 원장과의 총선 맞대결은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점에서 채일병, 이상열 의원과 총선 입지자들은 전 원장이 연임되기를 내심 기원(?)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전 원장이 총선에 출마하더라도 서로 자신의 지역구에는 출마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도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광주·전남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논란 재연

“두 자릿수 올려야” “인상 안된다”

의원들 “전국 최하위 수준 벗어나야”  
시민단체 “의정 평가로 결정해야”

광주·전남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현실화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는 가운데 시·도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가 내년도 의정비 책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잇따라 구성, 심의를 착수하면서 인상 폭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광주시 의정비심의위원회는 10일 오후 첫 회의를 개최했으며, 전남도는 오는 15일까지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각 시·군·구도 조만간 위원회를 꾸려 내년도 의정비 지급기준을 결정할 계획이지만 지역시민단체들은 벌써부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의정비 어떻게 결정되나=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와 여비,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각 자치단체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 정하며, 월정수당은 ▲지역주민의 소득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회는 10일 말까지 공청회나 여론조사 등을 거쳐 지급기준을 결정해 시장과 시의회의장에게 통보한다.

◇현 의정비 수준은=지난해 처음 책정된 의정비는 광주시의원이 4천 213만원, 전남도의원은 3천960만원으로 광주의 경우 광역시 중 최하위, 전남은 16개 시·도 가운데 최저 수준이다. 광역의원 의원은 서울이 6천

804만원으로 가장 많고 전국 평균은 4천463만원이다.

기초의원 의원인 경우 광주지역 구의원 이 평균 2천791만원, 전남은 광양이 2천883만원, 강진은 2천220만원 등이다. 전국 평균은 2천765만원. 이처럼 광주·전남지역 지방의원들의 의정비 수준이 낮은 것은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책정했기 때문이다.

◇두 자릿수 이상 인상 추진=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들은 지난달 대전 회의에서 내년 의정비를 서울시 의원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광역의원들은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관철시킬 태세다.

이미 충북도와 경남과 대구, 경북 의정비심의위는 15~26% 인상키로 잠정 결정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른 시·도의 결정을 지켜본 뒤 인상 폭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전남 시·군의회의장협의회도 지난 8월 회의에서 “무보수 명예직에서 유급제로 전환했지만 실제 받는 의정비는 의정활동을 위해서 턱없이 부족하므로 현실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최소한 사무관급 이상 수준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여론은 여전히 부정적=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이같은 연봉 인상 움직임에 부정적이다.

광주 경실련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의회는 의정비 인상 계획을 철회하고 의정 활동 개선방안부터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목포경실련은 지난 1일 목포대 지방자치연구소와 함께 목포 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내년에 목포시의원에 지급해야 할 의정비는 206만2천원, 전남도의원 의정비는 월 297만3천원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제시했다. 이는 현재 목포시 의원 의정비 215만원과 전남도의원 의정비 330만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나주풀뿌리참여자치시민모임도 지난 5일 시의원들의 공약이행을 촉구하면서 “지방의원들에 대한 의정 평가를 통해 의원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압박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2007년 수입 디젤 승용차 판매 1위  
해남·목포 지역구 의원들 연임설 반색

307 SW HDX

공용버스 모터스(주)